

# OPINION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 광남시론

### 새로운 통일시대, 간도협약무효운동 펼쳐야

####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박사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은 '100년후'라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 국제 정세를 예측했다.

그는 한반도가 2020년대나 2030년대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통일이 되면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신장위구르, 티벳, 만주등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때 만주지역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며 중국은 10억명의 극빈층과 회수 불가능한 채무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는 늦어도 2030년대 이전에 완전히 몰락할 것으로 보았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만의 전망과 같이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1당 독재에 저항하는 후진타오와 장쩌민등의 원로 그룹들과 시진핑의 권력층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변에서 그의 측근들이 조용히 한명씩 축출되고 있다. 실상가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분열이 가속화 되면서 지루한 러·우전쟁의 결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국제정세로 인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도 격변의 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발맞추어 한민족의 통일운동의 범위를 북방의 만주지역까지 넓혀야 할때가 도래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때 청일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이 국제적으로 무효로 확인되면 만주지역의 고토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박으로 을사보초조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한반도 점령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고시제40호로 독도를 강탈하고 이어서 1909년에는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를 청국에 할양했다. 간도는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이나 그 범위는 명백하지 않다.

1712년에 세운 백두산정계비는 동위토문, 서위압록(東爲土門, 西爲鴨綠)이라 규정되어있고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는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와 남만주 일대를 지칭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고구려, 발해시대부터 대한제국시절까지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다.

중국과 일본은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명백히 무효이며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영토 간도를 되찾는 일은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민족적 소망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의 의무이다.

한반도의 북방경계는 압록강과 백두산, 동쪽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하지만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도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한말 일제침략과 해방이후 남북분단으로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중국이 주장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간도는 방치되어 거의 100년을 흘려보내야 했다.

지난 20여년 전부터 우리 정치권과 세계지역학회 및 전남대 한상연구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일제강점기때 맺은 간도협약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4년 10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중국이 청·일간 간도협약의 무효성과 불법성을 간과한 채 동북공정, 장백산 공정, 요하문명론등을 통해 간도지역과 고대 동아시아문명사, 고구려사를 왜곡 축소 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8월28일 이명수 국회의원과 외 49인이 '간도협약 원천적무효확인결의'를 한 바 있다. 이 결의문에서 일제는 대륙점령의 발판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등 각종 이권을 얻은 대신에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일제가 권한이 없는 3국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해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아 이를 확인하고 선언했다.

또한, 2009년 9월1일 대한민국의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의 영토인 간도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접수했다.

차길진 법사를 중심으로 통일준비정부의 간도반환청구 대표단은 간도협약소송 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관계없이 한민족이 간도를 찾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만일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에서도 의미있는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간도는 우리의 옛 영토이지 현실적으로 영토회복은 당장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통일운동을 한반도 너머로 확장해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정확히 재정의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기고

### K-푸드,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수출이 산다

#### 홍우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2025년 8월 현재, 넷플릭스의 K-POP 기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 개봉 이후 한 달 동안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장한 음악도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외국에서 흔히 일본식으로 발음되는 '라멘(Ramen)'이 아닌, 한국식 표기인 '라면(Ramyeon)'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정체성과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남부지역, 특히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유자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식 발음인 '유주(Yuzu)'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유자(Yuja)'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본산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자의 독특한 향과 건강 효능이 주목받으며, 유자를 원료로 한 음료, 디저트, 조미료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한국 유자의 수출량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유자차 수출 금액은 2019년 3850만 4000달러에서 2024년 6132만 3000달러로 약 59%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유자 제품이 일본식 명칭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산 유자의 시장 점유율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자(Yuja)'라는 고유한 한국식 명칭을 정착시켜 한국산 유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K-푸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유자청 제품에서 벗어나, 유자 음료, 유자 발포 비타민, 유자 단백질, 유자 조미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유자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동시에 '유자(Yuja)'라는 고유 브랜드 명칭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지난해 전남농업기술원이 중국 현지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유자에 대한 인지도, 맛 평가, 구매 의향을 조사한 한 결과는 흥미롭다. '인지도' 항목에서는 응답자 5명 중 4명이 중국 유자와 한국 유자의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가적 출제와 교육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브랜드의 미비, 특히 '유자=한국'이라는 인식이 아직 현지 소비자에게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60%가 '한국 유자 제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품 자체의 매력과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을 시사하

며, 인지도와 브랜드 정체성만 강화된다면 시장 확대의 여지가 충분함을 의미한다.

'맛 평가'와 '구매 의향' 부문에서는 유자 발포 비타민과 유자 음료에 대해 각각 71%, 68%가 '맛있다'고 평가했으며, 정식 판매 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유자의 특유의 상큼하고 청량한 맛에 친숙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 음료(에너지드링크)를 개발해 중국에 30만 병을 수출했고,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제품 테스트를 넘어, 실제 소비 시장에서의 수요를 입증한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능성 음료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F&B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유자를 활용한 '프리미엄 기능성 제품'으로의 포지셔닝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한국 유자의 수출 전략이 단순한 품질 경쟁을 넘어, 정체성 있는 브랜드 구축과 현지 맞춤형 제품 다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자(Yuja)'라는 고유 명칭을 통해 한국산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기능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군 확대를 병행한다면, 글로벌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모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유자 수출을 넘어, K-푸드 전반의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취재수첩

###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 사라져야

####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인 노동력 착취와 폭행·폭언 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으로 전국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지적 수준

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폭행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수년간에 걸쳐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은 요란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경찰, 고용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면서 당국이 소홀히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앞선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특히 노동력 착취는 인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로, 강력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감시가 병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 당국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사설

### '섬 중심지' 전남, 체계적 보전·활용 절실

그동안 대략적인 추정으로 어렵 짐작했던 전남 섬이 2018개로 확정됐다. 이는 3390개인 전국 섬의 59.5%로 전남이 '섬의 중심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섬 통계는 혼선을 빚어 왔다. 주민이 1명 이상 등록된 유인섬은 행정안전부가, 만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섬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섬의 증복 지정이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섬진흥원은 행안부, 해수부와 함께 각 부처,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섬 현황과 데이터를 바로잡아 '2025년 유인섬 현황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섬은 유인섬 480개, 무인도서 2910개이며 전체 섬 거주 인구는 전 국민의 1.59%인 81만3475명이다.

전남은 유인섬 277개, 무인도서 1741개 등 총 2018개로 전체 섬의 59.5%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남(555개), 충남(285개), 인천(192개), 전북(130개) 순이다.

섬 거주 인구는 경남이 30만3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15만 5929명으로 인천(21만4317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만8049명), 충남(1만4546명), 경북(9099명) 등의 순이었다.

섬진흥원은 이번 섬 현황 공표를 시작으로 섬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고, 섬 개수, 인구, 면적, 시설 등 섬 관련 데이터를 총괄하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그간 섬 관련 통계 부재로 인해 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도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이번 결과를 지역 전략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한다.

섬은 국가방위와 해양자원 관리, 생태자원 보전뿐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등 다층적 가치가 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섬이 단순한 지리적 존재를 넘어 역사·문화·경제를 관통하는 생활 기반이라는 점에서 체계적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 광주시 '시민 우선 정책' 전국 모델됐다

광주시가 추진한 '국내 1호' 정책들이 전국화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거나 도입한 정책들이 타 지자체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도입한 'AI(인공지능) 당지기'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

당시 직원 중심의 당직제를 폐지하고 대신 이를 도입했는데 AI 기반의 당직지원 응대 시스템이 주·야간은 물론 휴일·평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민원 응대를 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극대화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입 이래 지난 6월까지 11개월간 총 2만1648건의 민원전화 를 받아 이 중 86%인 1만8540건을 처리했다. 한달 평균 1685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고충을 덜어주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가 되고 있다.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이 앞다투어 도입했으며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또 2023년 3월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의료서비스까지 결합한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를 확인할 정도다.

여기에 지난 2023년 9월 개원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밤 12시까지 야간·휴일 진료료 불 수 있어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있다.

전국적인 호평을 받는 이들 정책들은 그만큼 광주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 해결해 왔다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더욱 발전·진화해 나가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장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일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사 신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구로도 월 15,000원 1부 800원